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창재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cjlee@kiep.go.kr, Tel: 3460-1230)

방호경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위원 (bassgu@kiep.go.kr, Tel: 3460-1126)

차 례 ●●●

1. 머리말
2. 한·중·일 및 RCEP의 경제적 위상 및 무역의존관계 변화
3. 한·중·일 FTA 및 RCEP 논의의 전개과정
4. 한국의 대응방안

주요 내용 ●●●

- ▶ 2012년 11월 18~20일 동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역내국간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에서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됨.
 - 한·중·일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한국은 RCEP의 모든 참여국과 FTA 기체결 또는 협상 추진 및 예정 중인 상태가 되므로 한국의 RCEP 참여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동아시아 차원의 FTA인 RCEP 협상과 한·중·일 FTA가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이들 FTA를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과 세부전략이 요구됨.
- ▶ 한·중·일 FTA와 RCEP을 거의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한·중·일 3국의 입장에서는 ① 한·중·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RCEP 협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② 한·중·일 FTA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3국간 FTA를 RCEP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3국 입장에서는 3국간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CEP에서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한·중·일 FTA와 RCEP의 관계처럼 한·중·일 FTA와 한·중 FTA 및 한·일 FTA 간에도 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 FTA가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함.
- ▶ 한·중·일 FTA가 RCEP을 위해 필요하고, 지역 차원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한·중·일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머리말

- 2012년 11월 18~20일 동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역내국간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에서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됨.
 - 동아시아 차원의 FTA인 RCEP와 한·중·일 FTA의 필요성은 그동안 거시경제적 편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선진국 시장의 수요 감소를 대체할 역내시장 창출,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 같은 긍정적 측면 외에도 경제협력관계 심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강조되어 왔음.
- 한·중·일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한국은 RCEP의 모든 참여국과 FTA 기체결 또는 협상 추진 중인 상태가 되므로 한국의 RCEP 참여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한국의 총무역에서 한·중·일 및 RCEP 참여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 각각 30.2% 및 47.0%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 동아시아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에 기여해야 할 것임.
 - RCEP 참여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해 16개국임.
- 특히 동아시아 차원의 FTA인 RCEP 협상과 한·중·일 FTA가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이들 FTA를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정부는 명확한 입장 정립과 세부전략 수립을 해야 할 것임.
 -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일 및 RCEP의 경제적 위상 및 무역의존관계의 변화와 이들 FTA의 논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한·중·일 및 RCEP의 경제적 위상 및 무역의존관계 변화

가. 한·중·일 및 RCEP의 경제적 위상

- 한·중·일 및 RCEP의 경제적 위상은 1992~2011년 동안 비교적 빠르게 높아져 왔음(표 1 참고).
 -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19.2%에서 2011년 20.5%로 증가하였고, RCEP 회원국은 같은 기간에 23.7%에서 28.4%로 늘어났음.
 - 이 기간에 전 세계 수출(상품+상업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한·중·일은 12.1%에서 16.5%, RCEP 회원국은 18.8%에서 26.8%로 늘어났고, 전 세계 수입(상품+상업서비스)에서는 한·중·일이 10.6%에서 16.2%, RCEP 회원국은 17.6%에서 26.7%로 증가하였음.

■ 그 결과, RCEP의 경제적 위상은 EU 및 NAFTA는 물론 TPP 참여국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 인구 비중을 보면, 한·중·일(22.3%) 및 RCEP(49.1%)은 EU(7.4%), NAFTA(6.7%) 및 TPP(9.6%)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TPP 참여국은 미국, 페루, 칠레,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임.
- 경제규모도 RCEP이 EU, NAFTA보다 크고, TPP와 비교해도 거의 유사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 수출 및 수입에서 RCE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EU 보다는 적지만, NAFTA와 TPP보다는 큰 특장을 보임.

표 1. 한·중·일 및 RCEP의 경제적 위상

(단위: %)

	인구		GDP		수출		수입		FDI	
	1992	2011	1992	2011	1992	2011	1992	2011	1992	2011
한·중·일	24.0	22.3	19.2	20.5	12.1	16.5	10.6	16.2	2.4	5.2
아세안+3	33.3	30.9	21.0	23.6	16.9	23.1	15.5	22.5	6.0	10.5
RCEP	50.4	49.1	23.7	28.4	18.8	26.8	17.6	26.7	9.9	14.3
EU(27)	8.9	7.4	33.7	25.2	42.4	38.3	41.6	38.0	34.8	35.6
NAFTA	6.9	6.7	30.1	25.8	18.6	14.2	17.5	16.2	34.6	21.6
TPP	9.7	9.6	32.4	29.8	23.0	20.3	21.8	22.4	41.5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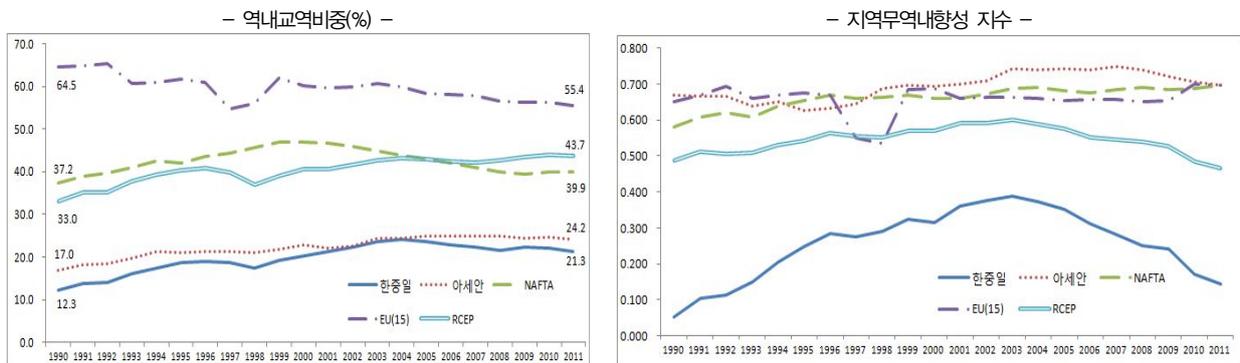
자료: Oxford Global Economic Databank;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TO Statistics Database; UNCTAD Statistics.

나. 한·중·일 및 RCEP의 무역의존관계 변화

- 한·중·일 및 RCEP 회원국 간에 거래되는 역내무역은 1990~2011년 동안 확대추세를 보여 역내국간 무역의존관계가 심화되어온 것으로 평가됨(그림 1 참고).
- 한·중·일 3국간 역내무역비중은 분석대상기간에 12.3%에서 21.3%로 늘어났고, RCEP은 33.0%에서 43.7%로 증가하여 NAFTA(39.9%)를 2005년에 추월하였으나 EU(55.4%)보다는 여전히 낮은 비중을 보임.
- 역내무역비중을 구하는 산식¹⁾은 역내국가들의 총 교역규모가 클수록 역내교역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는 역내국간 무역의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무역내향성지수(regional trade introversion index)²⁾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1) 역내무역비중 = $\frac{T_{ii}}{T_i}$, 여기서 T_{ii} 는 i 지역의 역내국간 무역, T_i 는 i 지역의 총무역을 의미함.

그림 1. 한·중·일, RCEP 및 주요 경제권의 역내무역비중과 지역무역내향성 지수 추이



자료: IMF(2012),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를 이용하여 계산.

■ 역내교역비중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구한 결과, 한·중·일 및 RCEP 모두 역내무역편향적인 특징을 보이거나 EU 및 NAFTA 등에 비해 역내무역편향 정도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남.

- 주목되는 특징은 역내교역비중의 경우 한·중·일과 아세안이 거의 유사한 비중을 보였으나, 지역무역내향성 지수에서는 한·중·일이 아세안보다 역내무역의존도가 낮은 특징을 보이는 것임.
- 또한 한·중·일 및 RCEP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200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한·중·일 및 RCEP 회원국의 역외무역이 역내무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이는 한·중·일 및 RCEP 회원국에서 최근까지 시장 주도의 무역의존관계가 심화되는 기능적 경제협력이 빠르게 진전되어 왔으나 이제는 FTA 같은 역내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제거 없이는 한계에 달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림 1]의 지역무역내향성 지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미 FTA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ASEAN, NAFTA 및 EU 회원국의 역내무역의존관계는 분석대상기간에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을 보인 반면, 한·중·일 및 RCEP은 최근 들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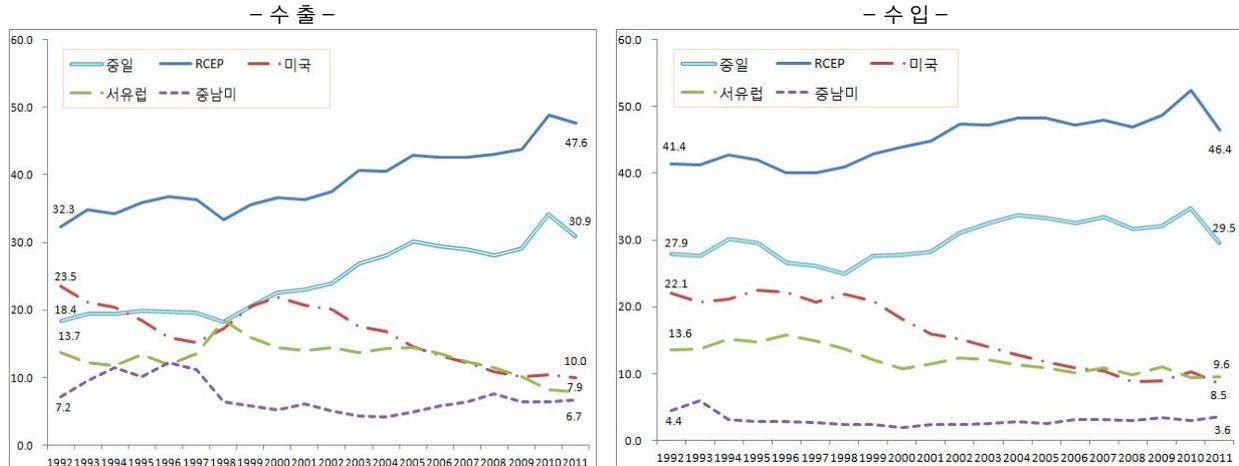
■ 특히 한국은 중일 및 RCEP 회원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이들 국가와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일과 RCE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18.4% 및 32.3%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들어 각각 30.9% 및 47.6%로 크게 증가한 바 있음.

2) 지역무역내향성지수 = $\frac{(HI_i - HE_i)}{(HI_i + HE_i)}$, 단 $HI_i = \left(\frac{T_{ii}}{T_i} \right) / \left(\frac{T_{oi}}{T_o} \right)$, $HE_i = \left[\frac{1 - (T_{ii}/T_i)}{1 - (T_{oi}/T_o)} \right]$ 임. 여기서 T_{ii} 는 i지역의 역내무역, T_i 는 i지역의 대세계 무역, T_{oi} 는 i지역의 역외지역과의 무역, T_o 는 역외지역의 총 무역을 각각 의미함.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특정 지역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0의 값이 나오면 그 지역의 대외무역은 지리적으로 어떤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 무역관계를 의미하며, 0보다 클 경우 역내무역 편향적, 0보다 작을 경우 역외무역 편향적임을 나타냄.

그림 2. 한국의 주요 지역별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주: 서유럽 및 중남미로 분류되는 국가는 World Bank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였음.

자료: IMF(2012),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를 이용하여 계산.

3. 한·중·일 FTA 및 RCEP 논의의 전개과정

가. 한·중·일 FTA

- 한·중·일 FTA에 대한 3국간 논의는 199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 제안에 따라 출범한 한·중·일 3국 대표연구기관의 공동연구에 의해 시작되었음.
 -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발전연구중심(DRC),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가 각국의 대표기관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는데, 2009년 일본 측 연구기관으로 아시아경제연구소(JETRO-IDE)가 지정됨.
 - 3국의 연구기관은 2003년부터 3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장기적 경제비전과 중기적 정책방향(Long-term Economic Vision and Medium-term Policy Directions)’이라는 제2단계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첫 번째 주제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를 선정함.
 - 이 연구는 2003~08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2009년에는 한·중·일 FTA의 중요성을 인식한 3국 정부의 건의로 제2기(Phase II) 한·중·일 FTA 공동연구가 추가로 수행됨.
 - 2009년 제2기 한·중·일 FTA 공동연구에서 3국 대표연구기관은 3국 정상에게 그동안 수행해온 한·중·일 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3국 정부 차원의 공식연구로 격상할 것을 건의함.
-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대표연구기관 차원의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하기로 합의함.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위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일곱 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공동연구의 결과가 2012년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보고됨.
- 2012년 5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역내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및 실무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을 즉시 실행하기로 합의함.
- 한·중·일 FTA 사전 실무협약이 총 세 차례 개최되었으며, 협상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해 논의됨.
- 애초 한·중·일 FTA 협상 개시는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선언하기로 하였으나,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3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상개시 선언이 이루어짐.

나. RCEP

- 1997년 12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정례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을 논의할 제도적 기반인 아세안+3 협력체제가 조성되었음.
- 아세안+3 협력체제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및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이 설립됨.
- 2001년 10월 EAVG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과 동아시아 투자지역(EAIA: East Asia Investment Area) 형성을 제안하였으며, 2002년 EASG가 EAFTA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채택함.
- 2004년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AEM+3: ASEAN Plus Three Economic Ministers' Meeting)의 결정과 아세안+3 정상회의의 승인에 따라 EAFTA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전문가 그룹(Joint Expert Group)이 구성됨.
- 2006년 8월 AEM+3에서 한국이 제안한 제2차 EAFTA 공동연구(EAFTA Phase II Study)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7년 1월 세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채택됨.
- 한편 제2차 EAFTA 공동연구와 거의 동시에 아세안+6(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공동연구(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가 일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음.
- 제2차 EAFTA 공동연구와 CEPEA 공동연구의 결과가 2009년 8월 AEM+3에서 동시에 보고됨.

- 아세안+3 장관들은 이들 연구의 건의에 따라 ① 원산지규정, ② 관세분류체계, ③ 통관이슈 및 ④ 경제협력 관련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고위경제관리회의(SEOM+3: ASEAN+3 Economic Senior Officials' Meeting)에서 합의하도록 함.
- 동아시아 차원의 FTA 논의는 전문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논의로 격상되었으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했음.
- 이는 참여국 범위를 둘러싼 대립, 즉 EAFTA를 선호하는 중국과 CEPEA를 선호하는 일본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것임.
- 2011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관한 아세안 기본틀(ASEAN Framework)이 제시됨.
- 아세안 기본틀에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아세안 입장에서의 기본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아세안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RCEP 대상국으로 설정됨.
- 이 외에도 아세안 개도국, 특히 아세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조치와 상품양허의 경우 높은 개방수준 및 역 내국간 단일 상품양허안을 모색하고,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중시하는 내용이 포함됨.
- 2012년 4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차기 정상회의(2012년 11월)에서 RCEP 협상 시작을 선언하기로 합의함.

4. 한국의 대응방안

가. 한·중·일 FTA 및 RCEP의 전개방향과 한국의 입장

1) 한·중·일 FTA

- 한·중·일 FTA 추진시 우선과제는 한·중·일 FTA의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도출임.
- 3국간 동일한 양허안을 택하는 3자간 합의방식과 양자간 합의방식이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3국간 합의방식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양자간 합의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양자간 합의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대중(對中) 무역에서는 농수산물 및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일(對日) 무역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이 민감함.

■ 그러나 3자간 FTA의 특성상 한·중·일 FTA의 공통적 협상방식 및 요소가 필요하므로 서비스투자 및 규범 등의 분야는 3자 협상을 진행해야 함.

- 이미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및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한·중·일 FTA를 추진해야 함.
- 2012년 5월에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바 있으나, 3국간 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일 FTA에 보다 진전된 투자보호와 개방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투자협정은 기존의 한·중 투자협정보다는 수준이 높지만 한·일 투자협정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한국은 한·중·일 FTA 추진 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경화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일 간 갈등이 향후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있음.
- 과거 한·중·일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한·중 FTA 추진의 영향을 받아 한·중·일 FTA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데 반해, 한·중·일 FTA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중국이 최근 일본과의 영토분쟁 등으로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한·중·일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경제 외적 상황으로 한·중·일 FTA 협상이 난항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2) RCEP

■ RCEP의 추진배경에는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내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자리잡고 있음.

- 첫째, RCEP 출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세안+3 차원의 EAFTA를 주장하는 중국과 아세안+6 차원의 CEPEA를 선호하는 일본 간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동아시아 차원의 FTA 추진이 지연된 데 있음.
- 둘째, 한·중·일 3국간 FTA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아세안에서는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조성됨.
- 셋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아세안 10개국 중 4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참여하면서, TPP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협상에 경쟁자로 부상하였고, 아세안 내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등장함.

■ 아세안+6 회원국 16개국이 모두 RCEP 협상에 참여하기로 선언함에 따라 결국 자유화 수준이 높은 지역 차원의 FTA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평균 자유화 수준이 90%가 넘는 여타 아세안+1 FTAs와 달리 아세안-인도 FTA의 경우는 8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 또한 상품양허 접근방식으로 단일양허안이 거론되고 있는바, 이 경우 높은 수준의 자유화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임.
 - 아세안 10개국을 하나로 보더라도 7개국(그룹) 간 양자간 협상이 진행될 경우 21개 협상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양허안 방식이 제안되고 있음.
 - 각국의 입장에서 모든 참여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양허안 방식이 진행될 경우 자유화 수준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타 아세안+1 FTAs에서는 90% 이상의 자유화 수준을 보인 데 반해, 아세안-인도 FTA에서는 48.7%의 자유화 수준을 기록함.

- RCEP은 높은 수준의 FTA임을 강조하면서도 역내 기체결 FTA들과 병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바, 향후 동아시아에는 중층적 구조의 FTA들이 병존할 것으로 예상됨.
 - RCEP이 체결된 후에도 기체결 FTA가 남아 있고, 새로운 역내 양자간 FTA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지역 차원 FTA 형성의 주요 동기인 스파게티 볼 현상³⁾의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 결국 RCEP은 아세안+1 FTAs를 대체할 수는 있을 것이나, 명실공히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아세안+1 FTAs는 아세안-한국 FTA, 아세안-중국 FTA, 아세안-일본 FTA 등을 일컬음.

- 그러나 한국이 동아시아 무역자유화의 주요 수혜국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RCEP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 RCEP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 동안 0.38~0.68%, 10년 동안 1.21~1.76%의 추가적인 증가가 예상됨.⁴⁾
 - 한편 이미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 협상을 지원할 수 있음.

- 한국정부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이나 통관절차 관련 조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역내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 지역 내 다양한 원산지 규정과 양허일정을 지닌 FTA 체결에서 오는 복잡성 때문에 본래 추구하려 한 FTA의 편익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는 효과를 일컫음.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청회 발표 자료집(2012년 10월 24일).

-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RCEP의 모든 참여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아세안 및 인도와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호주, 뉴질랜드 및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임.
- 또한 기체결된 아세안+1 FTAs에서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부문의 개방수준이 매우 낮았음을 감안할 때, 한국은 이들 분야의 자유화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역내생산 네트워크 증진을 추구해야 함.

나. 한·중·일 FTA와 RCEP의 우선순위 및 고려사항

1) 우선순위

- 한·중·일 FTA와 RCEP을 거의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한·중·일 3국의 입장에서는 ① 한·중·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RCEP 협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② 한·중·일 FTA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3국간 FTA를 RCEP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3국 입장에서는 3자간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CEP에서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에 비해 한·중·일 3국간 FTA가 기술적으로 훨씬 단순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2) 고려사항

- 한·중·일 FTA 및 RCEP의 협상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및 한·일 FTA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함.
- RCEP 및 한·중·일 FTA가 협상개시를 앞두고 있는 데 반해, 한·중 FTA는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한·일 FTA는 아직 협상재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한·중·일 FTA와 RCEP의 관계처럼 한·중·일 FTA와 한·중 FTA 및 한·일 FTA 간에도 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 FTA가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함.
- 한·중 FTA 협상개시로 한·중·일 FTA에 비교적 소극적이던 일본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됨.

- 한·중·일 FTA가 양자간 양허방식을 채택할 경우, 3자간 FTA는 각각의 양자간 FTA와 효율적으로 병행돼 추진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FTA에 대한 기본 틀 및 원산지 규정을 비롯한 공통부문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한·중·일 FTA를 추진하면서 한·일 FTA를 별도로 추진할지 결정할 수 있음.
 - 물론 한·중·일 FTA가 양자간 방식으로 양허안 협상이 진행될 경우,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
 - 만일 중·일 간 협상이 한·중 및 한·일간 협상에 비해 지연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국은 양자간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게 됨.

- 그러나 한·중·일 FTA가 RCEP을 위해 필요하고, 또한 한·중·일 FTA가 지역 차원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한·중·일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